



정책은 거들 뿐

1. 국내에서도 서서히 퍼질 정책 기대감

- 비상경제민생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후속조치 등 국내에서도 정책 관련
뉴스플로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 특히 5대 신성장 수출동력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
- 당장 올해 안으로도 예정된 세부
추진계획이 많고, 이에 따라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정책 기대감을 형성할 정부의 5대 신성장 수출동력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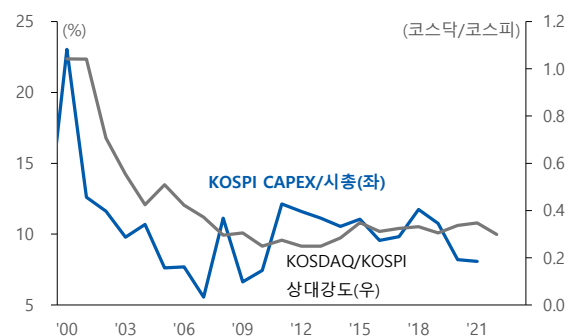
정책목표	구성	정책목표	구성
5 대 신성장 수출동력	주력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12 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해외건설		이차전지
			관광/콘텐츠
	디지털/ 바이오/우주		
			중소/벤처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정책의 목표와 확산 경로에 주목할 필요

- 다만 이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표와 향후
예상되는 확산 경로에 대해 주목할 필요
- 결국 현 정부가 언급한 것과 같이 기존
주력산업의 활력은 점차 둔화되고,
업종별로 시장여건이 상이하다는 점을
참고
- 경제 및 산업구조의 다변화와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도로
향후 중소형주에 수혜가 확산될 가능성

KOSPI의 시총대비 CAPEX 투자는 KOSPI 대비 KOSDAQ
지수의 상대강도와 유사한 흐름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국내에서도 서서히 퍼질 정책 기대감

지난주 10/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 28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후로 11/1일 이차 전지 산업 혁신전략 등 정책이 발표되었고, 앞으로도 발표될 예정이다. 그간 미국에서는 CHIPS Act, IRA 등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이 있었다. 이제 국내에서도 정책 기대감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시된 5대 신성장 수출동력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 기대감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이번 달만 해도 5대 신성장 수출동력 확보 관련 다양한 세부 계획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증시가 9월 급락에 이은 10월 반등으로 한숨 돌린 가운데, 향후 정책 기대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국내 정책 추진 관련 기대감은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정책은 거들 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차트1] 정책 기대감을 형성할 정부의 5대 신성장 수출동력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정책목표	구성	정책목표	구성
5 대 신성장 수출동력	주력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 대 국가전략 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해외건설		첨단 바이오
	관광/ 콘텐츠		우주항공/해양
			수소
	디지털/ 바이오/ 우주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중소/벤처		첨단로봇/제조
차세대 통신			
	양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정부의 세부 추진일정 상 이번 11월에 추진이 예정된 정책 진행방향: 향후 정책 기대감 높일 것

시기	내용
'22.11 월 추진 예정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11/1)
	방산 수출지원 강화
	원팀 코리아 수주지원단 출범
	해외 건설업 특별연장근로제 기한 180일로 연장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정책금융 확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추진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발표
	스마트농업 창업 지원 및 육성
	메타버스 활용 한국관광 홍보
	호텔 등 외국인 고용쿼터 규제완화 추진
	전자여행허가제 개선
	콘텐츠 연관산업 연계 해외진출 지원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수립
	디지털 바이오 혁신전략 수립
	국가 합성생물학 이니셔티브 마련

자료: 기획재정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정책의 목표와 확산 경로에 주목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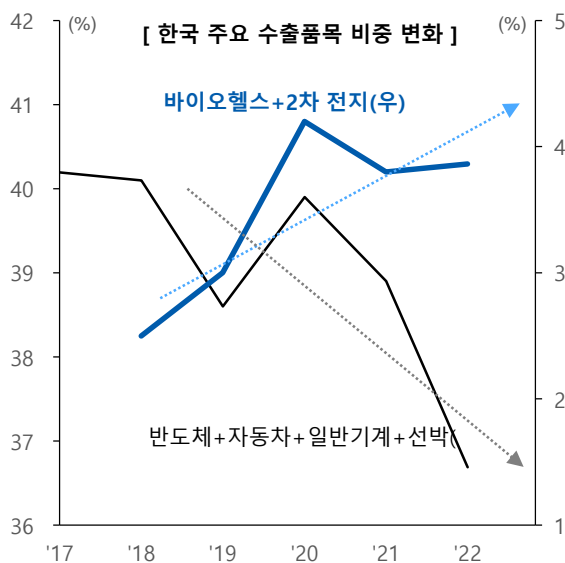
이번 정부의 정책이 지난 정부의 정책과 가장 분명하게 구분되는 점은 정책의 중심에 공공이 있는가 민간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예컨대 지난 정부의 한국판 뉴딜 2.0의 경우 국비 160조원을 포함한 220조원의 국책 사업이었다.

11/1일 발표된 이번 정부의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만 살펴보더라도 2030년까지 국내 기업들이 50조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계획된 가운데, 정부는 5조원의 대출 및 보증, 1조원 규모의 투자펀드 및 세제지원 확대, 1조원 규모의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결국 반도체를 비롯한 현재 주요 수출품목을 다각화하여 경제 및 산업구조의 특정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들로 하여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전략을 고도화하는 데 정부가 유인을 제공하는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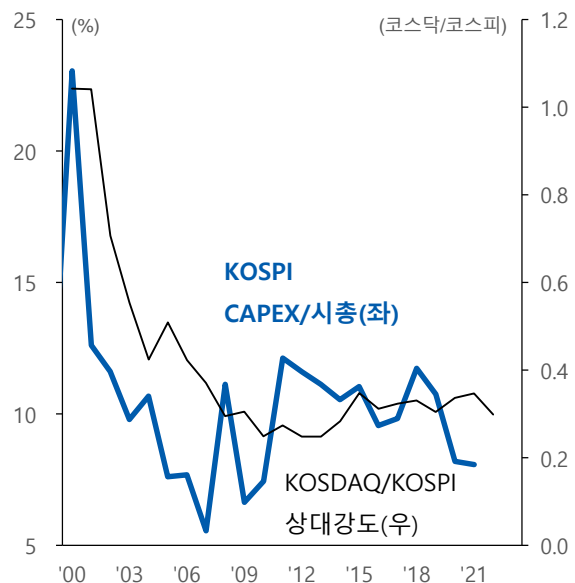
즉 정부가 먼저 이끌되 중심은 대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잡아나갈 것이다. 따라서 초기 정책 기대감은 대형 대표주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구체적인 투자가 집행됨에 따라 대기업을 투자가 중소형주 수혜로 확산되는 경우를 전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차트3] 결국 정부 정책의 목적은 경제 핵심 축인 수출에서 특정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경제동력을 다변화하는 것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KOSPI의 시총대비 CAPEX 투자는 KOSPI 대비 KOSDAQ 지수의 상대강도와 유사한 흐름



자료: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